

[로스쿨 소식]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기소개서 가이드라인 초안 6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가 지난 5월 13일 총회에서 합의했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해 이를 각 학교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협의회 차원의 유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은 인터뷰에서 큰 그림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고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학교에 이를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설정하더라도 이후 적용은 학교 재량에 맡긴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로스쿨 입학생 실태조사에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불공정 입학 소지가 있는 사례를 24건 적발했다. 이 중 전형요강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기재한 8건은 부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5월 13일 총회를 열고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로스쿨 원장들은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해서는 안 되는 사항과 제재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설정에 합의했다. 협의회는 현재 25개 로스쿨로부터 구체적 방안 설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하지만 이는 큰 틀의 참고용 지침이 될 수 있을 뿐 각 학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 이사장은 “가이드라인을 일종의 지침으로 삼아서 각 학교가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이를 각 로스쿨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원장단이 의견을 교류하는 단체 성격이라 가이드라인을 25개 로스쿨에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뜻이다. 결국 각 학교의 결정에 따라 준수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오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협의회는 어떤 사안을 각 로스쿨에 명령할 수 없다.”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는 있지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협의회는 수험생이 부정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가이드라인에 담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의 정도를 비교해 제재수위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내년 로스쿨 입시부터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 등을 기재하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도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할 경우 10% 이상 감점하고 있다.

그러나 오 이사장은 “(부모·친인척 신상을 쓰면) 무조건 실격이라는 제재 등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학교에서 정해서 시행하면 된다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제재 수위가 적절한지) 법리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룰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앞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의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대학자율에 맡기되 협의회는 각 학교가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비교하거나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하는 등 활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내부 위원회 등을 구성해 각 로스쿨의 의견을 수렴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6월 중 완성할 예정이다.